



내게 맞는 일자리 어디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행사'가 23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시민의 숲에서 열렸다. 청년들이 공공기관, 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이 마련한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치매 투병속 회고록?...측근들도 설왕설래

의혹 많은 전두환 '치매 진단'

광주법정 출석을 코 앞에 두고 23일 측근 입에서 나온 '전두환(87)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 투병'은 사실 조금만 뜯어보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치매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면서 자신의 회고록을 펴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판사(자작나무숲)를 통해 3권짜리 회고록을 펴낸 바 있다. 이 출판사는 아들 전재국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돌연 '알츠하이머 투병'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각종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된 노림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5·18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5년전 진단받고 작년 출판 의문 각종 책임 벗으려는 꼼수 가능성 6월항쟁 계엄검토도 부당된 듯 투병 사실 뎀 또 다른 논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등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사)에 대해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신분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에 부쳐졌기 때문이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5·18 당시 헬기사격은 실제였고 전 전 대통령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회고록과 관련하여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5·18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다. 최근 논란이 된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계엄검토 의혹도 전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골칫거리다. 시민단체 고발을 통해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1000여억원 역시 만만치 않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돼 풀려났으나 추징금 납부 의무는 살아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절반기량을 납부하고 재산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5·18관련 형사 재판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 투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회고록 출판에 누가 기획하고, 실제로 쓴 이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 진단 자체가 사실이라면

회고록 관련 전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 특성상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회고록 집필과 발간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알츠하이머 진단'을 얘기한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고 묻는 말씀에는 답도 곧잘 하신다. 그러나 30분 정도 지나버리면 본인이 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나마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현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장관 출신의 한 인사는 "이제 나이가 있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지 치매 그런 것은 아니다"고 광주일보에 전했다. 군 출신의 한 인사도 "지난해 봤을 때 많이 늙은 늙으셨구나"는 생각을 들었다. 그러나 치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재판장이 물으면 알아듣고 답할 정도는 된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두환, 아내 부축까지 받으며 광주 법정 서는 이유는?

형소법 예외조항 활용 향후 불출석 재판 의도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아내 이순자(79)씨의 부축까지 받아가며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광주지법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다. 재판에는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아내 이순자씨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일반방정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행보를 첫 재판 출석 이후 건강 이상 등을 내세워 향후 불출석 재판을 받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첫 재판과 마지막 선고 재판에만 출석하면 나머지는 재판은 불출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에 해당할 경우 피고인

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전 전 대통령이 기소된 자사명예훼손의 경우 최고형이 2년형으로, 장기 3년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불출석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선 법원이 이를 허가하고, 피의자는 반드시 첫 재판(제1회 공판기일)과 마지막 선고 공판기일 등 두 차례 출석해야 한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그동안 꾸준히 불출석 재판을 요구해왔다. 그들이 원하는 불출석 재판을 받기 위해선 일단 첫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전 전 대통령측에서 법원의 강제구인을 피하고, 불출석 재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의 법정에서

서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제로 재판 준비 중인 재판부는 만약 재판 당일 전 전 대통령이 어떤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첫 재판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첫 재판은 언론에도 공개한다. 재판부는 다만 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두 차례 재판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갑자기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인 만큼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6개월 된 어린이 2명 의자에 묶어 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재판 회부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보육을 맡아온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26개월된 어린이들을 의자에 묶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검사 전현민)는 "26개월된 어린이집 원생 2명을 어린이용 안전의자에 앉힌 뒤 1시간여 동안 낙하 방지용 안전벨트로 묶어놓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어린이집 교사 A(여·38)씨와 원장 B(여·42)씨를 재판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사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생 2명

을 총 12차례에 걸쳐 15분에서 길게는 50여 분 동안 안전의자에 앉혀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채워놓는 등 학대한 혐의다. 원장 B씨는 이런 교사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해당 어린이집에는 4명의 교사가 근무중이었으며, 오후 6시 이후에는 교사 1명이 맞벌이 부모들이 맡긴 어린이 관리와 청소 등을 담당해 왔다"면서 "교사 A씨의 경우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어린이들을 사실상 교사 A(여·38)씨와 원장 B(여·42)씨를 재판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사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생 2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서 낚시 자리싸움 끝 흥기 휘두른 50대 영장

목포경찰은 23일 낚시를 하던 지인을 흥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6)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10분께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중 B(65)씨의 배를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19에 의해 인근 대형병원에 옮겨진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흥기를 가져와 B씨를 찌렀다. A씨는 범행 후 수천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6시4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MB 시절 '땃글 공작' 전·현직 경찰 4명 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땃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장에 대해서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땃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보안 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땃글 4만여 건을 달았다.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땃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짜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땃글 1만 4000여건을 단 조사됐다. /연합뉴스

목욕탕서 옷장 열쇠 바꿔치기...돈 훔친 택시기사 '덜미'

○50대 택시운전기가 대중목욕탕에서 옷장 열쇠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옷장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쳤다. 23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택시운전하는 김모(58)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10분께 광주 남구 모 목욕탕에서 전모(58·사업가)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자신의 옷장 열쇠와 전씨의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옷장에서 현금 240만원과 가

방, 휴대전화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자신의 가방 안쪽에 전씨의 가방을 감추고 목욕탕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22일 오전 9시에 남구 모 마트 앞에 택시를 주차 중인 김씨를 검거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미 140만원을 써버려 1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추가 범죄의 정황이 있어 수사중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